



공정위 알림판

하도급거래 서면직권 실태조사 실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72%가 하도급거래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금액의 비중은 8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거래중단,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94~'98년) 하도급사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34%, 시정조치건수 기준으로는 27%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현장조사 위주의 조사방식은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개선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에 서면조사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대대적인 직권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년에는 6~7월중 원사업자(1,000개 업체)에 대하여, 8~9월중 이들 원사업자와 거래가 있는 수급사업자(2,000개 업체)에 대하여 각각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응답비율이 높거나 범위반정도가 큰 업체 등을 대상으로 10~11월중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서면직권실태조사 실시로 현장조사방식에 비해 조사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고 다양한 범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대해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교차점검을 통해 원사업자의 허위응답 방지 및 상시감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서면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령 및 관련제도의 내용 인식으로 범준수의식이 제고되어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매년 서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에는 조사대상업체를 20,000개로,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약 23,000개)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표 발송 및 취합, 조사결과 입력을 통한 하도급거래감사전산망(SCTMN) 구축 등은 민간조사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0년 예산안에는 민간조사기관 용역비 100백만원 등 총 16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2000년 서면실태조사 예산 반영내용>

(단위:천원)

구 분	2000년 예산안	구 분	2000년 예산안
합 계	159,971	직 권 조 사 여 비	28,806
조사표 등 인쇄비	31,186	조사표 발송, 전산입력 등	99,979